

시론



김일태 전남대학교수

이런 대선 정국만큼 각종 의혹과 해괴한 말과 장면들이 난무한 적이 없다. 민주국가의 선거에서 황당하게도 왕조시대조차도 금기시 되었던 손바닥의 왕(王)자 논란, 역술, 무술, 도사 등 상상할 수도 없는 미신적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대에 이르는 대통령 선거와 21대에 이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처럼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광경은 거의 없었다. 민주주의 선거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들에게 감동도 전혀 주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대선 후보들과 관련하여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이 쟁점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시스템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치가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적 행위인 투표에서도 맹목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경향을 표출한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이런 의혹이나 주술적 언어들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시키고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탐욕의 지대추구

앤 크루거(Anne O. Krueger)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지대는 원래 공급이 제한된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지대는 생산요소의 소유권 자체는 물론 독점 이윤을 포함하여 독점권의 소유로 확장되었다. 지대추구는 단체, 협회, 조립 등 특정이익집단이나 기업, 개인들이 독점적 이권이나 각종 특혜를 얻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비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로비, 소송, 약탈, 지급의 독점 이권은 민간의 기획 부동산이나 공적자산의 땅 투기를 넘어서는 행위로 법조인, 회계 전문가들, 언론인, 자산관리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특수목적법인)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려 관련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에서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하게 투기적 시장 기능이 작동하여 부동산 개발과 금융 산업에서 엄청난 부당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부의 분배가 비정상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기회의 공정성도 주어져 있지 않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한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지대추구(rent seeking)라 한다. 이 개념은 1967년 고든 툴록(Gordon Tullock)이 제시하였고 미국 경제학자

지적은 우리에게 조언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거대한 불평등(The Great Divide)'(2015)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민주당의 정통 귀족 계층 출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세금과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부를 고르게 분배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통해 자본주의 탐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자본가들의 즐거움과 엄청난 방해를 견디고 성공했다."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1968년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조작에 능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마저도 사회적 통합과 경제안정의 최선책은 투자로 메디케어(공공의료보장제도), 헤드스타트(저소득층 교육지원제도),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제도)에 투자하였고 연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아마도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오직 국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에 몰두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공정을 확보하고 상호 불신을 벗어나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서 스티글리츠가 지적한 것처럼 불평등 해소와 지대추구 규제를 실천한 역사적인 노력을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인구감소지역’ 최다 전남 지원특별법 급하다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지정해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전남 16개 군이 포함됐다.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이다. 경북과 함께 가장 많다. 이들 지역에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5천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범부처가 협업해 행정·재정적 지원은 셈이다.

전남의 인구 문제는 지속돼왔다. 사회적 유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 소멸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청년들이 교육·문화·일 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180만명 붕괴가 초읽기다. 출생아는 지난해 9천855명으로 전년(1만1천53명)보다 1천198명 감소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천125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 명도 없는 읍·면·동은 전체 297곳 중 2017년 2개 군 4곳에서 지난해 11개 시·군 23개로 늘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수의 산출 방법이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서열화 우려와 배제된 지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정부 및 타 시·도와 연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가칭)이 조속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었는데, 당연한 수순이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인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나를 의미하느냐 특별법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무리해야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장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에 투입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배정을 위해 전남도는 협쳐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확대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솜방망이도 트는 기회로 잘 활용돼 주길 기대한다.

결국에 해 넘기게 된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광주의 균형발전과 기형적 선거구 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내년 7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협력하는 구청과 구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바 몰라났다. 일부 정치인과 지역 간 엇갈린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2021년 8월 기준 전체 인구는 144만 1천97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10만 3천333명으로 가장 적다. 가장 많은 북구(42만 7천773명)와는 무려 4배 차이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밖에 광산구가 4만 4천413명, 서구 2만 2천400명, 남구 2만 4천51명이다.

광주시의회 집행기 의원이 인구·면적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수 형평성 문제 등 경계조정 필요성이 확인되 드러나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시민의 혈세로 연구용역을 했고 개편안 역시 채택한 상태이나 울 들어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시민 소통 등 제대로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구 경계조정에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 간 갈등만 커지는 모습으로 진척이 없다. 다른 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광주시의 고민도 깊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로나19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지역사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높은 때문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인들이 선뜻 동의하기도 어렵다.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경계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법령 규정상 관련 구청에서 건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자치구의 의지도 중요하다. 민선7기 햇바퀴만 돈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으로 이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광주시가 인센티브 등 사전 준비작업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 차질 책임 떠넘기기식 자체는 경계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기고



송기택 광주 동구청 자치행정국장

언젠가 미국 뉴욕에서 시소를 공공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시소는 혼자서는 즐길 수 없고 둘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장단을 맞춰야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놀이다. 공공장소에 시소를 설치한 이유는 함께 시소놀이를 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떠올려보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물질명명이 발달하고 고도의 정보화 산업사회에 들어섰지만 서구에서조차 공동체 정신 회복을 외치는 것은 다양한 집단의 조화롭고 안정된 통합을 전제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에 공동체 정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양극화

주민자치 성공모델 '마을사랑채' 주목

가 심화되고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31.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6.6%에 달한다.

광주 동구는 이보다 훨씬 상회해 1인 가구 비율은 47.3%, 65세 이상 인구는 21.7%에 육박한다. 동구가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1인 가구와 고령 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이유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마을의 기운을 되찾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동구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주민수도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마을별 거점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일과 이후에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마을사랑채 6개소를 조성

했다. 낡고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마을활동가와 봉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유 부엌과 다목적실을 비롯해 북 카페, 소통방 등 편의공간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지역의 핵심 민간자원이 참여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설 운영을 주도로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음악, 미용, 집수리 등 재능기부자 봉사실천단을 모집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마을사랑채에서는 면 마스크 제작, 반찬 나눔, 이·미용 봉사, 다문화 교육 등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며 마을의 소통거점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활동가를 집중 양성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마을 가꾸기와 마을복지, 마을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마을활동가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전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해 2018년 50여 단체에 불과하던 마을공동체가 올해 100여 개 단체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운동을 주동적으로 펼치며 마을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속적인 나눔 봉사와 공동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마을별 거점 시설과 인적·물적 자원,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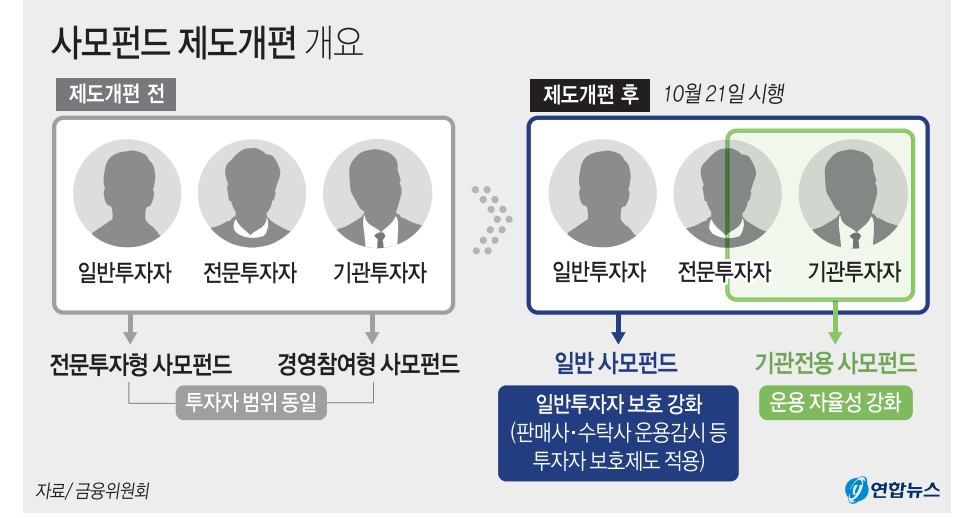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을사랑채는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 확산지원 우수사례', '2021년 잠룡은 지방자치 정책대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주민자치 모델로 발돋움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자치활동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발전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복지금 조성 및 수익사업 발굴, 주민세(균등분)의 주민자치 재원으로의 전환 등의 등을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과 마을복지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그래픽 뉴스

라이프·옵티머스 사태 막는 사모펀드 법령 개정



제2의 라이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됐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돼 이달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뉠 현행 체계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투자형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투자형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표준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한다.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여수 한재로는 지난 9월1일부터 4.5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대해 내리막길에 동행제한을 시행했다. 지난 7월20일 한재사거리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사고 후 전화상으로 "나도 그런 적 있어 위험할 뻔 했다"라고 전화를 주신 분도 있었다. 올해 3월에도 5t 화물트럭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이 있었다.

한재로를 살펴보면 터널을 지나 한재사거리까지 1.3km 가량 연속적인 내리막길 구간이 있다. 신호기, 횡단보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 브레이크를 밟았다 뺐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스펀지를 밟는 것

처럼 폭폭 끼지는 '베이퍼록' 현상과 라이닝과 드럼의 마찰열 증가로 순간 제동력이 저하되는 '페이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에서는 '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서행이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제동속도만큼이라도 유지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제동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설치 등 속도저감 시설을 강제적으로 설치해 서행을 유도해보지만 일률적인 간격 설치공란으로 저감 시설이 없는 구간에선 마음 놓고 과속하는 실



정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엔진브레이크 사용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요즘 차량기술 발달로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졌다 하지만 사람이 과속에 불법까지 하면 원래 출고차량의 적절한 브레이크 제동에 한계를 넘게 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피해는 이번 사고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엔진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엔진이 브레이크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주행 중 엑셀 페달에서 다리를 떼기만 하면 된다. 별거 없다. 대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단

(1단, +)기어를 사용하고, 필요시 풋 브레이크도 사용하면 감속능력은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산간지역을 잇는 도로망이 형성된 곳에서는 사고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내리막길에는 '엔진브레이크 사용'이라는 표지판을 세워 운전자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화물운전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내비게이션 진로탐색을 곤란하게 만들어 '차량통행제한'이라는 극약 처방 이전에 운전자 스스로 적정중량으로 제동속도를 준수하고 그 일환으로 차량자체를 이용한 엔진브레이크 사용에 다시는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바람이다.

(홍주영·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시설팀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기부 650-2030	사건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실시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예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